

‘중앙1·첨단3·방직까지’ 광주시-땅주인·주민 지역서 갈등

특례 민간공원과 연구개발(R&D) 특구, 방직공장에 이르기까지 도심과 공원부지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토지 소유주, 광주시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해 충돌에 따른 이들 갈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공개 집회와 집단 항의로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섬세한 행정과 효율적인 갈등 조정 능력이 시합대에 오르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는 재산권 제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즉각 (특례 대상)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앙공원 1지구 땅주인 80~90명이 참석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전체 지구 관계인은 5000여 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사업 부지인 풍암호수와 중앙공원은 80%가 사유지고, 특히 중앙공원 80%는 조상 대대로 농사 짓고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온 개인 땅”이라며 “그럼에도 1975년 국가가 공

중앙공원 1지구·첨단3지구·보상 놓고 갈등 표면화

전남·일신방직 주민들 “의견 배제” 시장 면담 요구

이해 관계·공익 vs 사익 간 충돌·갈등 조정 시합대

원으로 지정한 이후 소유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희생만 강요당한 채 지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됐지만, 시는 형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만 내 놓고 보상은 나몰라라한 채 공원땅에 그림만 그려 놓고 사업이 다 된 양 자랑하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감정평가만 6개월째 진행 중이고 ‘보상해 준다’는 말만 믿고 빚을 내 피눈물로 버티는 소유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들은 “(시가) 사업 계획을 조정한다고 해 6개월 넘게 기다려더니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보상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고, 어렵다면 공원에서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공장부지 인근 주민들이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전남·일신방직 이전 주민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총 30만㎡에 이르는 공장부지 개발 논의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 사이 임동은 옛 영광을 잃은 채 도시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주민 삶의 질 또한 저하됐다”며



“최근 개발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외부세력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다”며 시장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공공성과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개발계획이 또 무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민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태스크포스(TF)는 중단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두 공장은 조

선인 여성노동자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시는 지난달 24일 건축물 현황을 공유한데 이어 이달 중순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과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가 들어설 광산구 첨단3지구 364만㎡(110만평)을 둘러싼 보상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땅주인들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난 지난해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장물 보상 조사를 해 달라며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갔다.

반면 시는 특구로 지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보상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 간 이해관계 충돌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행정 당국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합대에 놓였다.

보상이나 수용, 개발과 같은 민간 행정의 경우 이해충돌이 불가피함에도 서둘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행정, 성과주의 행정이 스며들 경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적 가치와 법률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선 행정의 완급 조절과 함께 소통 창구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 원칙과 유연함 사이에서 세련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선욱기자



‘봄꽃이 왔어요’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광장에 심어질 봄꽃이 옮겨지고 있다

공구로 금은방 문 부수려 한 중학생들 입건

무안경찰서는 3일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금품을 털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14)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50분경 전남 무안군 남악읍 모 금은방 출입문

을 공구로 수차례 내리쳐 침입을 시도,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이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역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최근 기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절도 행각

을 벌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길에서 주운 공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으나, 무단 침입 정황을 포착하고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에 의해 덩치가 잡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대면예배 강행’ 안디옥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전도사와 함께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재판 넘겨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집합·대면 예배를 강행한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준근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과 30일

신도 67명, 신도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치러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15 서울 도심 집회 여파로 광주에서 1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 전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

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A·B씨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목사와 전도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송출을 주관하는 필수 요원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지침상 필수 요원은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며 행정명령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B씨가 당시 방역 당국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치른 점,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무관하게 대면 예배를 주관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4월 14일 열린다. 한편 안디옥교회 일부 목사는 지난해 9월 6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 활동을 금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